

정부,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대상 '불공정 행위' 잡는다

공정위, 5·6월께 대상 확정 후 진행
경쟁사·매출 현황·경쟁제한 등 여부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 수행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과 불공정 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26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대상,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어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관련 매출액, 온라인 구매 이용률 등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5,6월께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정 후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87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실태조사 취지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큰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간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주요 조사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 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 여부 등 사업 전반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국내외 사업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그간 국내 사업자들만 대

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해외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이 수행한다. 자체 연구 활동과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과 관련해 3월 26일 ~ 4월 22일까지 4주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 별도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과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1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원으로 급성장 추세다. 해외직구 금액도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2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저수지 사전 방류 특허기술 민간 개방

농어촌공, 재난·재해 골든타임 확보

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 공사가 자체 개발한 저수지 사전 방류 장치인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지식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집중호우·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했다"며 "인위적 수위 조절 장치가 없는 농업용 저수지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을 개발해 재난·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사이펀은 물의 수위 차를 이용한 방류 장치로 저수지 내 저수량 방류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무게가 무겁고 고정된 형태로 설치 과정이나 작동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펀의 구조적 장점을 활용하되, 조립을 통해 이동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개발로 기존 3~5일 걸리는 설치기간을 2~3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또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지난해까지 전국 거점단위 지사 29개소에 31대를 보급해 장마철 총 30회/저수량 928만톤 사전 방류로 하류 주민 피해를 방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술특허를 마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장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실시간 저수율 관리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상공인 중대재해법 대응 돕는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 업무협약

추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취지다. 양기관은 지난 2015년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양기관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6개국 2321t 첫 수확

농식품부, 당초 목표 2040t 14% 상회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 등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t)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가나 330t을 비롯해 감비아 180t, 세네갈 66t, 기니 1119t, 카메룬 111t 우간다 515t 등이다.

지난해 시작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작년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해당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했다.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했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KOPI



(왼쪽) 벼 종자 건조 세네갈, (오른쪽) 생산종자 포장 우간다. /농식품부

A란 농진청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뜻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대륙 거주민 30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참여 국가들과 신속하게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의사록이란 사업 범위와 기간, 예산, 각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국간 사업 착수 전 체결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또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데스크'를 설치해 인력을 과감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직 현지 종자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비료나 농약, 농기계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참여국 간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생산된 종자가 아프리카 식량안보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K-라이스벨트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소·소상공인, 수출시장 가담 후 퇴출 빈번

통계청 '기업 특성별 수출 현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출시장에 처음 가담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반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비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6%를 넘었으나 소상공인은 2%대에 그쳤다.

통계청은 25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기업 특성별로 본 소상공인 수출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출기업 진입률은 29.7%, 퇴장률은 29.1%로 변동성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역시 진입률 25.2%, 퇴장

률 24.7%로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수출시장 가담·퇴출이 빈번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진입률이 7.0%로 신규 진입이 어려웠으나, 퇴장률 또한 8.0%로 일단 시장에 들어서면 수출에 견고하게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활동기업 중 수출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은 34.2%에 달한데 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참여율은 각각 1.2%, 0.8%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6821억 달러였다. 이 중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83.4%(5687억 달러)였고, 이어 중소기업 수출액이 16.6%(1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수출액은 14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김연세 기자